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위기 대응 II: 북미·아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일리노이州, 텍사스州, 하와이州
캐나다	캐나다(전국),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앨버타州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전국), 쿠알라룸푸르市
인도	인도(전국), 델리NCT 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전국)
일본	일본(전국)
중국	베이징市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 위기 대응 Ⅱ: 북미·아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등 임차인 보호대책 시행	3
	일리노이州	이민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	7
	텍사스州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지원	10
	하와이州	‘고위험군’ 홈리스에게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13
캐나다	캐나다(전국)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에게 긴급 보조금 지원	17
	브리티시컬럼비아州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위기관리 보조금 지급	23
	앨버타州	임대료 인상 금지 등 세입자 보호대책 시행	2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전국)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30
	쿠알라룸푸르市	노숙자 임시보호소 및 무료급식소 운영	33
인도	인도(전국)	지역별 상황에 따라 봉쇄령 완화	35
	델리NCT 외	감염 고위험 지역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	3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전국)	의료·사회보장·경기회복 프로그램 시행	39
일본	일본(전국)	중소기업 등의 도산·폐업 방지대책 시행	42
중국	베이징市	개인휴대폰의 QR코드 활용해 생활 방역활동 진행	45

임대로 납부기한 연장 등 임차인 보호대책 시행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코로나19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월 4일 광역도시권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월 15일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일체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였음. 시는 도시정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실시간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LA 광역도시권역에서는 임차인 보호대책 등 다양한 행정명령, 공공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

LA 광역도시권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LA 광역도시권역인 LA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3만여 명, 사망자는 천여 명
- LA 광역도시권역에서는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고, 도시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
 - 그러나 의료장비 및 인력 부족과 함께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는 의료보험 체계, 공공의료시스템의 한계로 확진자 치료 및 진단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LA카운티의 주요 행정명령 및 긴급정책의 내용

- 지역 비상사태 선포(Local Emergency)
 - LA카운티 비상관리사무국(Los Angeles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3월 4일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
- 코로나19에 대한 LA 도시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LA시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에서 3월 7일 작성된 코로나19 대비 가이드라인을 도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 3월 12일 발표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모임이나 지역행사 등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
 - 대규모 모임이나 지역단위 행사 주최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보건

당국, 숙박시설, 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 방역 및 개인 위생 용품을 비치하며, 참석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함

○ 코로나19 대응 새로운 도시정책 발표(3월 15일)

-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LA市는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
 - 市는 광역도시권 내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여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영업장이나 식당 및 기타 시설의 운영을 우려해왔음
- 주점 및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 식료품점 등 식음료를 취급하는 곳은 배달, 포장음식에 대한 영업만 허가하며, 극장 및 단체 관람시설, 체육시설 등은 운영을 중지. 이를 위반할 시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대업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임대료 독촉 및 강제퇴거조치를 금지

○ 상업용 건물 임대료 납부 연기 허용(3월 17일)

- 캘리포니아州는 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세입자도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 상업용 건물 임대료 연체 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사업체 영업 중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긴급치료비 지출 등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임대료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를 법으로 금지
 - 이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대료 지불 면제는 아님

○ 외출자제 명령(Safer at home) 시행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市는 3월 19일 외출자제 행정명령을 시행
 -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외출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허가
 - 은행 방문, 주택 및 자동차 수리, 이사, 장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외출은 가능

○ LA 지방조례로 정하는 모든 행정업무의 마감일을 시장 권한으로 연기(3월 21일)

- LA 광역대도시권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조례로 정하는 행정 업무, 도시계획 관련 업무, 공청회 및 기타 의사결정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지방조례로 정하는 모든 공공업무의 마감일을 연기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업무와 허가 신청,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력 발생일 등도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연기

-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 금지 및 주차단속 완화
 - 배경
 - LA시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자가격리 및 확진으로 인한 자택치료 중인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 또한 주차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단속을 완화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LA시는 도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퇴거 조치를 금하며, 개인 및 단체, 공권력 및 기타 제3자의 강제퇴거 조치를 금지
 - 제조업을 비롯한 상업용 차량, 의료행위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 자동차 등록일 연장,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3월 25일)
 - 외출자제 명령으로 자동차 등록, 면허증 취득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
 - 이에 자동차 등록일, 운전면허 갱신일 등의 날짜를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3월 30일)
 -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연체, 실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 LA시는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후 60일 동안 임대료 인상 금지
- 세입자 보호조례 시행
 - 임대료 관련 행정명령을 앞서 발표한 데에 이어 이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가 요구
 - LA시는 3월 31일 시의회를 통해 ‘긴급사태 시 세입자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앞서 발표한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임
- 추가적인 유급병가 시행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택 혹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거나 가족 중 확진자 발생으로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유급휴가 확대가 시급한 상황
 - LA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발생의 경우 법정 유급병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4월 7일 조례를 통과

- 식료품, 약국, 식품배달 부문 근로자 보호 정책(4월 7일)
 - 외출자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약국, 식품배달 등 기본생활과 관련된 근로자들은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 이에 자녀 돌보기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 일정을 변경할 권리 보장
- 사업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토콜 발표(4월 10일)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LA市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음
 -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원 대상 프로토콜을 발표하고 사업장마다 해당 실천 항목을 표시하여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 LA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LA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기한 연장(4월 17일)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주택단지 개발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일정을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

<https://corona-virus.la/>

<https://www.lamayor.org/COVID19Orders>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DPH%20Guidance%20for%20Mass%20Gatherings%20and%20Large%20Community%20Events_ADA%20Compliant.pdf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291_reso_03-04-2020.pdf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Mayor%20Memo%20-COVID-19%20LA%20City%20Guidelines.pdf>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Mayor%20Garcetti%20Emergency%20Order%20-%20March%2015%202020.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이민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

미국 일리노이주 / 코로나19

미국 일리노이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및 이웃 지역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 중.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전 상담, 실업수당 신청 간소화, 식재료 배달 등의 서비스 제공. 특히 이민자·유색인종·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5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 일리노이주는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약 9만 명, 사망자 수는 약 4천 명
 - 미국 전체 주에서 일리노이주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높은 순위 차지
 -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시카고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수준
 - 일리노이주는 코로나19 집중 감염 지역인 시카고시와 가까운 외곽 지역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 또한 일리노이주와 이웃하고 있는 미시건주, 위스콘신주, 인디애나주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교류를 진행해 코로나19의 미국 중서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대응 방안

-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중 유색인종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일리노이주 전체 흑인 비중은 14.6%지만 4월 현재 일리노이주 코로나19 확진자의 30%, 사망자의 40%가량이 흑인
 - 흑인 인구 비율이 30%로 일리노이주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시카고시에서는 코로나 19 흑인 확진자가 4월 현재 52%, 사망자는 72%를 차지
 - 일리노이주와 이웃한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역시 흑인이 인구수에 비해 확진자 및 사망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유지
 - 이는 미국 내 유색 인종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의료보험시스템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시사

- 흑인뿐만 아니라 이민자와 같이 미국 사회 내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이 통계로 나타남
- 일리노이주는 소수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의 병원 운영을 재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홍보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시카고市 역시 지역 활동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흑인과 이민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보건 캠페인을 선언
- 시카고市는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코로나19 예방책 홍보물과 안내 영상을 제작해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
- 나아가 실업수당 신청방법 등을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고, 신청절차를 최소화

○ 일리노이주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중 하나인 노인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 시니어센터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 진행
 - 일리노이주는 州정부 차원에서 요양원 거주 고령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특히 州정부 차원의 검사 지원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 시카고市는 노숙자 쉼터와 의료시설 내 마스크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자 쉼터와 의료시설 내 무료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감염증 확산 최소화
 - 매주 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스크 드라이브’ 이벤트 날로 정하고 각급 단체, 기관, 개인의 기부로 모인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적극 지원
- 복지단체, 비영리재단 봉사자,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고령자에게 생필품 지원
 - 일리노이주와 시카고市 내 다양한 복지기관, 비영리재단 봉사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노인층이 필요한 식료품과 도시락을 배달하고, 생필품을 지원
 - 특히 州정부 및 市정부의 인력 부족과 비상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관,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기부를 통해 노인층의 어려움을 최소화
 - 슈퍼마켓 등에서는 노인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식료품,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전시간대에 65세 이상만 입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층도 실업수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련 절차 간소화
 - 지역 내 기관과 기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시사점

-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해외 우수 코로나19 대응책을 적극 도입하여 현지 상황에 맞게 시행
 -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법 적극 도입
 -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식료품점 및 대형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쓰기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권장. 마스크 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에게 공익광고와 안내문을 통해 마스크 쓰기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림
 - 기타 해외 우수 사례를 계속해서 적용
- 이웃 지역과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씀
 - 일리노이주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근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
 - 이웃 지역인 미시건, 위스콘신, 인디애나주 등 중서부 지역의 주와 소통하며 필수 산업 외 비필수 산업 부문의 재가동 시점 논의
 - 오후 10시 이후 특별한 목적 없이 타 주로 여행을 가는 시민들을 제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정책을 이웃 지역과 공동 시행
- 이민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 보호정책 시행
 - 일리노이주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파산, 이민자 추방, 질병 사망과 같은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
 - 특히 주차 위반, 이민 재판, 주거 퇴거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제공
 -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정책 시행 예정

<https://www.chicago.gov/city/en/sites/covid-19/home.html>

<https://www.cdc.gov/>

<https://coronavirus.illinois.gov/s/>

<https://www.dph.illinois.gov/covid19>

<https://www.nbcchicago.com/news/local/illinois-coronavirus-updates-nursing-home-concerns-highest-one-week-death-toll/2259241/>

강기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지원

미국 텍사스주 / 코로나19

미국 텍사스주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실업이 전망됨. 주 내 대도시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및 필수근무자를 위한 대책을 시행. 최근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기명령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텍사스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약 5만 명
 - 최초 확진자는 3월 4일 발생
 - 텍사스주에서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텍사스는 최근 유가 하락 및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 및 실업이 전망됨
 - 3월 15일부터 4월 11월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약 102만 명으로 2019년 신청자보다 많음. 3월 실업률은 4.7% 기록

지역정부 차원의 대응책

- 텍사스주 전역의 자택대기명령(Stay-at-home Order)
 - 3월 25일 발효되어 4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주지사의 연장 선언으로 4월 30일까지 연장
 - 필수 업종을 제외한 업체들은 운영 중단. 필수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침 준수, 비필수 업체는 재택근무로 운영 지속
 - 생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이 아닌 활동은 금지. 필수 활동에는 식료품점, 약국, 의료서비스, 식당 방문 및 산책 등이 해당
 - 위반 시 최고 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180일 이하의 구금형에 처함

- 카운티 및 市에 따라 더욱 강한 제재 시행
 - 오스틴市는 재택안전근무 명령(Stay Home - Work Safe Order)을 3월 25일 발령
 - 필수 활동 및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재택안전근무 명령
 - 델러스市도 자택대기명령을 5월 15일까지 연장
 - 델러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행
 - 공공장소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착용을 의무화
 - 카운티 내 2세 이상에게 적용
 - 위반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
 - 갈레나파크(Galena Park)는 4월 4일 야간 통행 금지를 포함한 '공공 안전 명령 (Public Safety Order)'을 발표
 -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필수 혹은 비상 목적 제외 통행 금지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 델러스 시의회는 4월 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430만 달러 규모의 市 예산 승인
 - 병원 및 응급의료요원, 경찰, 소방 공무원 및 市 공무원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구입
 - 코로나19 전담 차량, 노숙자를 위한 격리 숙소 마련
- 취약계층 및 필수 근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
 - 오스틴市는 수도와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Customer Assistance Program)을 활용하여 저소득 층 및 취약계층의 요금을 경감
 -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 차단을 중단
 - 휴스턴市는 필수 근무자를 위한 보육 및 재정 지원
 - 0~12세의 자녀를 둔 필수 근무자들에게는 보육센터 및 재정 지원
- 경제활동 재개
 - 텍사스州는 4월 29일부터 소매점 영업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
 - 정상영업이 아닌 픽업 및 배송을 위한 영업 재개
 - 고객의 매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결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
 - 매장에서 픽업 시 직원은 고객 차량의 뒷좌석 및 트렁크로 물품 전달

- 주지사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 의료 자문 등을 받아 경제활동 재개 검토
- 텍사스주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자택대기명령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도 순차적으로 재개

<https://www.dshs.state.tx.us/coronavirus/>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unemployment/?_ga=2.254360584.1455752587.1587431139-1666919716.1587431139

<https://tpwd.texas.gov/newsmedia/releases/?req=20200420a>

<https://www.dallascounty.org/covid-19/>

<https://houstonemergency.org/covid19>

<https://www.houstonchronicle.com/houston/article/City-of-Galena-Park-issues-daily-curfew-15181694.php>

<https://www.dallasnews.com/news/public-health/2020/04/08/dallas-city-council-approves-43-million-in-protective-equipment-rvs-and-hotel-rooms-for-quarantine/>

<https://www.khou.com/article/news/health/coronavirus/find-houston-child-care-assistance-now-with-new-program/285-c6ae1a5f-d159-497f-ac14-f1a8fb1d4770>

https://apps.texastribune.org/features/2020/texas-coronavirus-cases-map/?_ga=2.13253687.1455752587.1587431139-1666919716.1587431139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고위험군’ 홈리스에게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미국 하와이주 / 코로나19

미국 하와이주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강력 시행하고 있는 방역대책으로 미국 전역에서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나, 관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실업률이 급증. 주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홈리스에게 긴급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이동금지령(셧다운)’의 단계적인 해제를 논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하와이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현재 600여 명, 사망자는 10여 명
 -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하와이대학교(마노아 캠퍼스)는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잡은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미연에 차단한 점이 확산을 막은 주요 이유라고 분석
 - 실제로 4월 1일부터 주정부가 하와이주에 속한 8개 섬 간의 이동 시에도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강제. 이를 어긴 주민에 대해서는 1차 경고 및 벌금 최대 1만 달러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추방’을 예고
 - 다만 하와이주에 속한 8개 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많지 않아 방역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목소리도 제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실업률 급증
 - 미국 유력 언론 ‘USA TODAY’에 따르면, 하와이주의 실업률이 4월 현재 20%를 넘어서고, 5월 현재 30%를 넘어서는 등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 등이 실업률 2~3위를 기록
 - 4월 현재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사우스다코타주(약 5%), 웨스트버지니아주(약 6%), 플로리다주(약 6%) 등으로 집계
 - USA TODAY의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집계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약 3주 동안의 전국 실업률을 추산해 해당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미국 노동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하와이 소재 대형 호텔과 여행사 등은 3월 25일 ‘셧다운’ 이후 일제히 운영을 멈춘 상태. 이로 인해 해당 호텔과 여행사에 고용됐던 상당수 근로자들은 업체 측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일시 해고 또는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상태
- 대량의 실업사태에 대해 州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기반 사업이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州정부는 ‘셧다운’ 이후 하와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했으며, 더 큰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실업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시



[그림 1] 하와이 州 오아후(Oahu)섬 호놀룰루 일대의 상점들이 ‘셧다운’ 이후 문을 닫은 모습(통신원 직접 촬영)



[그림 2] 하와이 州 오아후섬 호놀룰루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이 영업을 정지한 모습(통신원 직접 촬영)

대응 방안

- 주민이동금지령 발령
 - 하와이 州에 속한 총 8곳의 섬에는 3월 25일부터 주민이동금지령이 발령
 - 관광업을 기반으로 하는 하와이의 특성상 기반 산업이 마비되면서 최악의 경우 실업률이 37%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된 상태

○ 감염 위험이 큰 홈리스에게 긴급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 미국 내에서 거주 인구수 대비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은 하와이에서 코로나 사태는 홈리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계기가 됨
 - 미국 전체 인구 중 홈리스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70명인 것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약 449명의 홈리스 비율을 기록 중인 하와이는 최근 7년 동안 미국 내에서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음
 -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노출 위험이 큰 홈리스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 이에 대해 州정부는 4월에 홈리스 전용 코로나19 관리소를 개소하고, 호놀룰루의 이윌레이(Iwilei) 지역에 코로나19 의료격리센터를 설치해 홈리스 중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우선적으로 격리 수용해 치료
 - 해당 센터는 사회 복귀를 앞뒀던 연방 죄수들을 위한 중간 거주지로 활용한 건물로, 州정부는 오랜 기간 비어있었던 이 건물을 최근 900만 달러에 매입해 격리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총 26개의 격리 병실을 운영
 - 州정부는 홈리스 전용 의료센터 개소를 위해 현지 의료단체와 퇴직한 호텔 근로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일 평균 60여 명의 홈리스에 대한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홈리스에 대해서는 격리 치료
 - 州정부는 총 120일 동안 현지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 긴급 지원. 이 기간 동안 600여 명의 홈리스들이 이용하게 될 전망

○ 무료 식음료 지원행사 개최

- 실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위해 알라모아나 센터(Alamoana)에서 구세군 무료 식품 지원 행사를 진행. 이 행사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몰려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확인
- 4월에 진행된 식료품 무료 나눔 행사에서는 계란, 빵, 우유, 감자 등을 배포

○ 실업급여 지원

-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州정부는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4만 4,300건의 실업급여 신청을 받은 상황이라고 발표
 - 하와이州的 등록된 노동인구 수가 65만 1,65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많은 인구가 실업 상태에 빠졌음을 알 수 있음
 - 하와이 경제연구소는 실업문제와 관련해 향후 1년 동안은 평균 13.7%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특히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가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을 경우 침체되는 기반 경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이번 경제침체 규모가 하와이 주민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州정부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근로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
 -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의 재직 중 무급휴직 상태의 근로자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
- 단계적 수순의 섣다운 해제 움직임
 - 하와이州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인 봉쇄 해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州정부는 단계적 봉쇄 해제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다만 州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등은 2021년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
 - 단계적인 봉쇄 해제 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관광업으로, 봉쇄 해제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 이와 관련해 州정부는 여행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전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힘
 - 또한 5월 중에 섣다운과 관련한 일부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힘

<https://manoa.hawaii.edu/publichealth/news/2020/04/14/hawaiiis-coronavirus-infection-rate-among-the-lowest-in-the-us-so-far>

<https://manoa.hawaii.edu/publichealth/news/2020/04/14/why-hawaii-cant-be-sure-if-its-prepared-for-a-covid-19-surge>

<https://manoa.hawaii.edu/publichealth/news/2020/04/02/hawaiiis-geography-and-widespread-testing-are-a-dvantages-in-the-covid-fight>

<https://manoa.hawaii.edu/publichealth/news/2020/03/31/epidemiologist-hawaii-has-advantage-during-covid-19-pandemic>

<https://www.staradvertiser.com/2020/04/15/hawaii-news/second-cluster-of-hawaii-coronavirus-cases-found-at-mcdonalds-in-kona/>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에게 긴급 보조금 지원

캐나다 / 코로나19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 원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비상관리 코디네이터, 지역 의료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응.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돕기 위해 1,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지원. 아동 양육 수당을 아이 1명당 300달러를 더 지급. 소득이 없어진 근로자에게는 최대 16주 동안 월 2,000달러를 제공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및 대책

-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7만여 명, 사망자는 5천여 명
 - 1월 25일 첫 감염자가 발생
 - 지역별로는 퀘벡(Quebec)주, 온타리오(Ontario)주, 앨버타(Alberta)주,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가 많은 편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
 -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사례가 1월에 발생하자, 캐나다 보건청은 1월 중순에 비상운영센터를 가동
 - 3월 9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3월 14일 필수적이지 않는 여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여행자들이 캐나다로 입국하였을 때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을 권고
 - 3월 18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 국제공항 이용자들은 캘거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게 됨
 - 같은 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발표
 - 3월 23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난을 겪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생명과학 분야 기업 지원을 발표
 - 3월 27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
 - 3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
 - 4월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에 이르러자 4월 3일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건강 문제를 돕기 위한 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영향

○ 경제에 끼친 영향

- 4월 15일 발표된 3월 국내 총생산 추정치에 따르면, 3월의 실질적 GDP 감소는 9%로 추정
 - 이는 1961년 이래 월별 감소치 중 가장 큰 규모로, 2020년 1분기 실질 GDP도 약 2.6%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
- 3월 제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제조업 매출이 약 4억 6,5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0개 제조업체 중 1개 업체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 섬유, 석유 및 석탄 제품, 전기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유행과 전국 철도망 마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 전역의 공장이 섯다운(shutdown)되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매출 감소를 초래

○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 4월 9일 발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취업자가 2월부터 3월 사이 1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
- 단축근무가 늘고 해고에 따른 실직 증가.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급증

○ 관광시장에 끼친 영향

- 4월 14일 발표에 의하면, 3월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미국인의 수는 30%가량 하락
- 또한 비행기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 역시 지난해 3월에 비해 올해 3월 60%가량 감소

대응 방안

- 캐나다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을 창설하고, 최고 공공보건 책임자(Chief Public Health Officer)를 임명하여 지역 보건 최고 책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인플루엔자 대비책을 개발하고, 국립 미생물연구소 진단 역량을 강화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같은 국제 파트너와의 업무 관계를 강화

-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COVID-19 대응반을 소집하고, COVID-19 연방 대응 위원회를 신설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응 분야
 -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
 - 캐나다인들의 공공보건 조치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가 할당되었고, WHO에 200만 달러를 기부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
 - 캐나다 공공보건청에 5천만 달러를 제공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안내전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캐나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들과 연방 각료들의 정기적인 브리핑을 시행
 -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자들의 정보를 받아 고위험 지역에서 오는 경우 선별 조치하고, 모든 여행자들이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아프면 지역 보건 기구에 연락할 것을 권고.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들이 비상대응센터와 해외 공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약 2,700만 달러를 캐나다 전역의 47개 연구팀에 지원하여 개발, 시험, 시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백신과 항바이러스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2억 7,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
 - 지역 지도자 및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협력
 - 연방정부는 종합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30개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 지역 원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주민서비스국(ISC)의 지역 비상 관리 코디네이터, 전염성 질병 코디네이터, 지역 의료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응
 - 필수품과 의약품 등 보건물자 조달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역에 5억 달러를 지원하고, 개인보호장비(PPE) 및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
 - 국제적 대응에 기여
 -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취약국가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잠재적인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기타 파트너들에게 5,000만 달러의 추가 국제 지원을 제공

- 경제적 탄력성 보장
 - 코로나19 감염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상품 가격, 세계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3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연방정부 및 10개 주정부 재무장관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일자리, 근로자, 기업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찰
 - 코로나 사태로 사업 침체를 겪고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1,200만 달러를 지원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 캐나다 정부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경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 및 과학적 조언을 제공
 -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위한 인적 자원을 재할당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공공보건기구와 연구소를 위해 연방정부는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병원, 장기 요양시설, 식료품점 등과 같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급여를 지원
 - 아동 양육 수당을 아이 1명당 300달러를 더 지급. 이는 가구당 550달러가 더 지원됨을 의미
 -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공제액을 개인당 400달러, 부부당 600달러 제공
 -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장하고, 연체이자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음
 - 은행들과 협력하여 최대 6개월간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진 1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대 16주 동안 월 2,000 달러를 제공. 또한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동안 매달 최대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 그 외에도 원주민, 노인,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짐
-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긴급 임금 보조금으로 고용주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존. 3월에 최소 15%의 총 수입 감소와 4~5월에 30% 총수입 감소를 겪은 모든 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 임금의 75%를 지급. 이는 6월 6일까지 12주 동안 시행
- 작업 공유 프로그램 기간을 38주에서 76주로 연장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직원들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
- 또한 중소기업 대출보증, 중소기업 공동 대여 프로그램, 무이자 대출, 긴급 상업 임대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 연기, 그 외에도 자영업자 및 원주민 사업자들을 위한 특별 경제 지원
- 사업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농업, 농식품, 양식업, 수산업 등 식품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기간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5천만 달러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또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위의 조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1,500달러를 지원
 - 생산자, 농업인, 식품 가공업체에 50억 달러를 추가 대출해 판매손실을 최소화
 - 문화, 스포츠 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해 5억 달러를 지원.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정부에 최대 1,7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의약품과 필수 물품의 항공 운송이 원활하도록 함
 - 연방정부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21개 공항에 대해 3월 12월까지 지상 임대료를 면제
 - 국립공원, 유적지, 해양 보전지역 관광사업자와 협력하여 9월 1일까지 무이자로 상가 임대 및 점용 허가에 대한 지급을 유예
 - 이 외에도 석유 및 가스 같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와 협회에 17억 2천만 달러를 지원
 - 또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

정책적 시사점

- 연방정부와 州정부, 市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이 다름. 경제적 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 및 교육 정책 지원은 州정부에서 주로 맡음
- 캐나다는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가 연방정부 사이트와 통계청 사이트로 통일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수월
- 연방정부와 통계청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주간·

월간·분야별 보고서가 제공되어 다양한 2차 연구가 가능

- 개인별 경제적 지원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돋보임
 - 최전선에서 일하는 시민들, 프리랜서, 학부모 등에 대한 고려를 잊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와 여름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
-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간단하고 빠름
 -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긴급 지원금은 인터넷으로 3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40시간 내에 지원.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나 지원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우선 지급 후 검토 원칙을 고수

캐나다 연방정부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topic=tilelink>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businesses-employees.html>

캐나다 통계청 <https://www.statcan.gc.ca/eng/start>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위기관리 보조금 지급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코로나19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3월 이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대책과 조기 대응, 공중보건시스템 등으로 타 주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위기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1월 26일 최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3월에 본격적인 확산세를 보였으며, 3월 25일 정점을 찍고 4월 10일 이후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2천여 명
 - 퀘벡주의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3만여 명, 온타리오주는 약 2만 명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경제적 영향

-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40% 이상의 소상공인이 업소를 폐쇄하고 나머지 업소도 어려움에 처함
 - 주 내 주요 도시인 밴쿠버시, 씨리시, 버나비시 등에서 대량 무급휴직 시행
 - BC ferries, 밴쿠버 아쿠아리움 등에서 대규모 감원 단행
 - 밴쿠버시는 최대 189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
 - 캐나다 전역에서 4%대의 양호한 실업률을 기록하던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4월 현재 7%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
 - 주 내 주택가격도 내림세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도 감소

대응 방안

- 방역 및 보건
 - 대한민국 방식을 모델로 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
 - 식당은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
 - 비(非)필수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하고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 비필수 서비스에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도 포함

- 치과의 경우 높은 수준의 보호장비를 갖춘 인가된 치과에서 과다 출혈, 염증 등 응급 진료에 한해 영업을 허가
- 부활절 등 종교 행사와 관련된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
- 감염병에 따른 정신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백만 달러의 예산과 200여 명의 심리학자를 투입. 이는 주로 노약자, 청소년, 최전선 의료실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시민에게 경고장을 발부.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교통

- 시내버스 및 전철 탑승 인원수 제한 및 뒷문 탑승 허용
-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시험 등을 일시 유예
- 州 전역의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보험을 취소하거나 재개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취소/개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존 고객에게도 연체료 없이 90일간 보험료 납부 유예

○ 교육

- 州정부 공식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관된 교육을 제공
- 저소득층 학생에게 아이패드 혹은 노트북을 무상으로 지급해 온라인 교육 시행

○ 경제

- 연방정부 차원의 고용주 지원대책 실시
 - 사업체의 고용유지를 위해 3개월 동안 임시 급여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를 지원
 - 근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노동시간에 동의하면 정부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리고 신청 대기기간을 줄이는 혜택을 적용
 -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 저리(低利)로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학교세를 50% 감면
- 비상사태 처벌기준 강화 발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적용
 - 식품·의약품·개인보호장비·청소용품 등 필수 물품에 대한 사재기 엄금
 - 식당 내 식사 및 모임 금지와 같은 州정부의 지침을 어길 시 공권력 행사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州 공급망을 재정비해 공급을 제한하는 모든 규약을 중단

○ 복지

-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기관리 보조금 지원
 - 약 25만 명에게 3개월간 300달러를 지급
 - 50억 원의 州 예산 투입
 - 특수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장애 보조금이나 소득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노인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도 해당되며, 정기 보조금에 300달러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2인 이상 자녀의 한부모 가정에게도 기존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
- 소득의 25% 이상 감소로 인해 집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에게 월 500달러의 임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
- 학자금 대출금 상환 6개월 동결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세금 인상 연기
- 1,000달러 비과세 혜택 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 기후실천 보조금(Climate Action Tax Credit) 인상
-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기준법 개정
- 필수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스템 제공
- 전력회사 BC hydro는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환급을 시행해 최대 47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대상 州정부 판매세, 지방자치단체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세 및 탄소세 등의 세금 인상을 9월 30일로 연기
- 州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

○ 향후 조치에 대한 준비

-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을 일부 적용하여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6월 중으로 단계적인 개방을 준비
- 확산 진정세에 따라 학교 등교 시기를 6월로 앞당길 계획

정책 평가

- 해외에서 캐나다로의 주 유입 경로 중 하나가 밴쿠버인 관계로 브리티시컬럼비아州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 폭증을 예상했으나, 타 州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州의 공중보건시스템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공중보건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음

- 다른 州보다 일찍 고위험지역인 요양원 등에 대한 조치를 조기 시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http://www.bccdc.ca/health-info/diseases-conditions/covid-19/data>

<https://www.openschool.bc.ca/>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bc-ontario-quebec-covid-19-1.5524056>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임대료 인상 금지 등 세입자 보호대책 시행

캐나다 앨버타주 / 코로나19

캐나다 앨버타주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치료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을 대량 확보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 또한 주정부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 임대료인상, 연체료청구 등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2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캐나다 앨버타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월 현재 6천여 명
 - 앨버타주에서 확진자는 3월 1일에 최초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산업·경제적 영향
 - 정부에서는 올해 실업률을 25%까지 예상
 - 에드먼턴시청, 캘거리시청 등의 직원 임시휴직 시행(전 직원의 약 10% 규모)
 - 캘거리시는 약 1,500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
- 사회적 영향
 - 교육예산의 재난지원금 전용과 함께 학교 폐쇄에 따른 보조교사 수요 감소로 주 전역의 보조교사 2만여 명을 해고
 -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아시아인 혐오 현상이 동부 퀘벡주, 온타리오 주에서 몇 건 나타나고 있지만 호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극히 제한적

대응 방안

- 방역 및 보건
 -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던 확진 검사 대상을 4월 12일부터 증상이 의심되는 전 주민으로 확대
 - 비(非)필수 서비스의 영업을 금지하고 15인 이상 모임을 금지. 비필수 서비스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도 포함
 - 국립 공원과 주립 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마을 놀이터도 폐쇄

- 앨버타주 보건국은 신속하게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해 25만 개의 N95 마스크와 25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타 주에 기부할 것을 발표
- 인구당 검사건수를 확대해 확진자를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기존 병상과 산소호흡기가 타 주에 비해 다량 갖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치사율을 기록
- 교통
 - 시내버스 및 전철 탑승 인원수 제한 및 자리배치 거리두기, 뒷문 탑승 허용
 -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시험 등을 일시 유예
 - 미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필수적인 수출입 트럭만 통행을 허가
- 교육
 - 국가 차원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에게 6개월 무이자 기간을 부여
 - 주정부는 교육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것을 의결
- 경제
 - 국가적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로 1개월 동안 0.5% 인하하고 자영업자 대상 4만 달러 무이자 대출 실시
 - 주정부 차원에서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 임대료인상, 연체료청구 등을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책을 시행
 - 주정부는 2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공립학교 신설, 법원 등의 시설보수, 도로보수에 사용
- 복지
 -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캐나다 긴급대응혜택(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4월 1일 발표
 - 3월 15일 이후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월 2,000달러를 4개월 동안 지급
 - 학생 및 월소득 1,000달러 이하 재직자도 4월 15일부터 수혜자로 추가
 - 계절 근로자 및 최근 실업수당 만기가 도래한 경우도 포함
 -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대책으로 최근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기업의 경우 직원급여의 75%를 지원
 - 긴급 부가가치세 환급(300~500달러) 및 아동수당(1명당 300달러) 지급
 - 원주민 대상 총 3억 5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발표
 - 주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긴급대응혜택(CERB) 시행 전까지 지원

- 전면 폐쇄 명령이 내려진 아동돌봄시설의 일부를 다시 열어 수용인원을 확대
- 市 차원에서 신청자에 한해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3개월 연기
- 캘거리市와 에드먼턴市는 市 소재 컨벤션센터를 노숙자에게 개방

정책 평가

- 미국처럼 州별 독립성이 강한 캐나다의 특성상 州별 대응방법이 다소 상이하지만, 연방정부가 대부분 재정적 지원 및 보건 관련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첫 확진자 발생 한 달 만인 4월 1일 전격적인 실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과 함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실업수당 지급방안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위상을 보여준 반면, 부정수급자 문제 해결은 과제로 남음
-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준비할 시간이 많았고 낮은 인구밀도 등 양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직장폐쇄 등의 정책으로 경제적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
- 평시에 보여준 복지국가의 면모와는 달리 재난상황에서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감염병 발생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점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

<https://www.alberta.ca/covid-19-alberta-data.aspx>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emergency_preparedness/covid-19.aspx#stack135876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nationalpost.com/pmnn/news-pmn/canada-news-pmn/alberta-to-share-surplus-ventilators-masks-and-gloves-with-ontario-quebec-and-b-c>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말레이시아 / 코로나19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GDP의 약 18%에 달하는 총 2,600억 링깃(약 73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코로나19 피해 완화, 국민 중심 경제 성장, 투자 증진 등이 주요 내용. 또한 100억 링깃(약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가 발표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7천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
 - 총 검사인원은 4월 말 현재 10만 명을 넘음.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과 함께 많은 검사인원을 기록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이동제한 명령에 국제유가 하락과 링깃(ringgit)화 약세 등이 더해져 산업 전반의 경영난 악화와 고용위기,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 초래
 - 세계은행은 올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4.5%에서 -0.1%로 하향 조정. 최악의 경우 -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관광업
 - 정부는 올해를 ‘말레이시아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관광 캠페인 취소
 - 관광객은 전년 대비 30% 감소, 손실규모는 300억 링깃(약 8조 900억 원)으로 예측
 - 소매업
 - 소매업 전망은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최악
 - 1분기 소매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 하락, 4월은 전년 동기 대비 60.7%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동제한 명령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63.3%에 해당하는 209,000곳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동제한 기간의 월별 가구당 소비는 이동제한 명령 시행 이전보다 55% 감소

- 제조업
 - 이동제한 명령으로 모든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2차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하면서 필수사업장에 한해 해당 시설의 절반 가동을 허용
 - 3월 말레이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전월 48.5에서 0.1포인트 하락한 48.4 기록. PMI 수치가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
- 민간투자
 - 말레이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SERC)는 민간투자가 전년 대비 1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수요 감소로 전기전자(E&E), 팜유, 석유 가스 등의 산업이 위축
- 고용
 -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MIER)는 240만여 명이 실직하고, 이 가운데 67%는 비 숙련 노동자가 될 것으로 전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 마하티르 총리가 2월 24일 사임한 뒤 3월 1일 무히딘 야신 의원이 총리로 임명되어 3월 9일 새 내각을 발표하는 등 정권 교체기에 행정 공백이 발생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국경폐쇄를 포함한 이동제한 명령(MCO, Movement Control Order) 시행
- 이에 앞서 정부는 200억 링깃(약 5조 6,6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2월 말 발표
 -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피해 완화, 국민 중심 경제 성장, 질적 투자 증진임
-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2.85%에서 2.5%로 인하해 고시(3월 3일)
 - 기준금리가 2.5%까지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1차 전 국민 이동제한 명령(MCO)을 발령
 - 3월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종교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이동제한 명령 발령
 -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정부기관 및 개인 사업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시민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 금지. 경찰 등은 드론을 동원해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단속
-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지급준비율을 3%에서 2%로 인하(3월 20일)

- 이 조치로 300억 링깃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2,500억 링깃(약 69조 5,325억 원)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발표
 - 1차 경기부양책이 각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3월 27일 새롭게 발표
 - 주요 골자는 국민 복지,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 국가경제 강화 등임
-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차 이동제한 명령 시행
 - 1일 확진자 50명 미만이라는 목표에 미달하면서 강화된 2차 명령 발표
 - 거주지에서 반경 10km 이내로만 이동하도록 제한. 식료품점과 음식점,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 전철·택시 운행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 100억 링깃(약 2조 7,8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가 발표(4월 6일)
 -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 포함
-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3차 이동제한 명령을 발동했으나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명령 해제
 - 코로나19 녹색지대 28곳에 한해 세탁소, 안경점, 미용실 등의 영업을 가능하도록 조치
 - 녹색지대(Green Zone)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곳을 지칭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0/03/28/saving-malaysias-economy>

<https://www.cnbc.com/2020/04/20/southeast-asia-could-be-the-next-coronavirus-hot-spot-these-charts-show-why.html>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0/04/02/malaysia039s-pmi-ticks-down>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0/03/28/saving-malaysias-economy>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0/04/01/world-bank-cuts-malaysia-gdp-forecast>

<https://asiatimes.com/2020/03/malaysia-singapore-doomed-to-covid-19-recessions/>

<https://www.malaymail.com/news/what-you-think/2020/04/16/an-epidemic-for-malaysias-economy-felicicia-chong/1857328>

<http://www.moh.gov.my/index.php/pages/view/2019-ncov-wuhan>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노숙자 임시보호소 및 무료급식소 운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코로나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동제한령에 따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정·보완해 시행. 이 조치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였다는 평가

배경

-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동제한 명령(MCO) 조치에 따라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수정·보완해 시행

주요 내용

- 노숙자를 위한 임시보호소 설치
 - 쿠알라룸푸르시(DBKL)는 500여 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소 마련
 - 잘란 파항(Jalan Pahang)과 안중 싱아(Anjung Singgah)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소와 총 4곳의 시의회 복지관과 다용도 공간을 임시 보호소로 지정
 - 임시보호소 이용 전 모든 노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 실시
 - 임시보호소는 크게 세 개로 구분
 -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없는 자, 신체적 질환이 있는 자, 정신적 질환 또는 마약 중독자에 따라 보호소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개인용 텐트 설치
- 무료급식소에 새로운 규정 적용
 - 이동제한 명령 기간 동안 사회복지부(JKM)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의 음식 배급을 지원
 - 음식을 배급하는 비영리단체는 하루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사회복지부 또는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에 음식을 전달
 - 비영리단체는 조리식품 또는 건조식품만 배급 가능
 - 음식은 자원봉사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
 - 무료급식은 1일 6회(아침, 점심, 저녁, 오전 간식, 티타임, 야참) 제공

- 이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는 이동제한령 준수가 목적
- 교통 약자에게 교통편 지원
 -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 11곳의 주민대표위원회에 승합차 지원
 - 교통 약자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고 위급상황 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대표위원회에서 운전자 지정 및 예약 관리
 -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추가로 승합차를 지원하며,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 77개 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발표

정책 평가

- 코로나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 중요시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 기존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해 노숙자와 교통 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그림 1]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제공된 텐트



[그림 2] 주민대표위원회에 지원하는 승합차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0/04/03/soup-kitchens-adapt-to-new-sop>

<https://www.asiaone.com/malaysia/more-shelters-homeless-while-mco-remains-force-malaysia>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4/07/cubicles-installed-at-dbkl-homeless-shelter-in-social-distancing-boost-vide/1854237>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지역별 상황에 따라 봉쇄령 완화

인도 / 코로나19

인도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봉쇄령을 시행.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4월 말부터 일부 작업장 등의 조건부 완화를 허용하였으나, 델리NCT 지역 등 감염 위험 지역에서는 봉쇄령을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30일 남부 케레랄州에서 최초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5월 현재 15만여 명이고 사망자는 4천여 명 수준
 - 인구규모 대비 확진 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의료인프라 부족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 위험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와 검역 강화를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치한 것으로 평가
 - 중앙정부는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폭발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가봉쇄령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5.8%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며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전망
- 국가봉쇄령에 따라 주민 이동 제한과 함께 필수재 이외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소득 감소와 생계유지에 어려움 야기
 - 특히 인도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에 큰 타격

대응 방안

- 방역대책은 정부에서 인정한 필수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철저한 봉쇄를 바탕으로 진행
 -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활동을 제외한 주민이동을 금지하고 자택대기를 명령
- 중앙정부는 3월 22일 전 국민 외출금지 발표를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3주간의

국가봉쇄령 발령

-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세로 봉쇄령을 추가 연장하였지만, 4월 20일부터 일부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
- 4월 20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작업장, 복지시설 등 일부 부문에 한해 조건부 완화
- 텔리 지방정부는 3월 14일 학교 휴교, 문화시설 운영 중단, 재택근무 권고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국제선 항공기 운항도 중지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생산, 물류 등의 활동을 보장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적으로 강조
 -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종사자의 통행 허가를 위해 지역 경찰서에서 통행증 배부
- 국가봉쇄령 해제 이후에도 감염 주요지역 봉쇄, 지역별 이동 차단, 교통수단 운행 중단 등은 제한적으로 유지
 - 특히 텔리NCT, 텔렝가나주, 편자브주 등의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봉쇄 조치를 유지하며,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



[그림 1] 일정 간격을 띄운 줄서기 안내선



[그림 2] 국가봉쇄령에 따른 도로 검문소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835/list.do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coronavirus-india-live-news-updates-17265-covid-19-cases-in-india-and-543-deaths/liveblog/75228082.cms>

<https://yna.co.kr/view/AKR20200408103400077?input=1195m>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감염 고위험 지역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

인도 델리NCT 외 / 코로나19

인도 정부는 감염 고위험 지역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고 방역용품 및 생필품 사재기, 폭리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델리NCT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4월 14일까지 1차 봉쇄령을 시행한 데 이어 봉쇄조치를 5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

- 인도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도 전역에 대한 봉쇄령(1차)을 발표
- 이어 4월 14일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로 전국적 봉쇄 조치를 5월 3일까지 연장
 - 4월 20일까지는 강력한 봉쇄를 유지하고, 핫스팟 지역 통제도 유지
 - 핫스팟 지역은 확진자가 6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정되며, 핫스팟 지역 주민의 자택 격리와 의약품과 식품 배달 외 외부인 출입 금지
- 의료서비스, 농수산, 금융, 물류 이동은 4월 20일부터 일부 완화된 조치 적용
- 방역용품 및 생필품 사재기, 폭리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조치는 6월까지 유효
-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식품과 조리용 가스 등의 무료 공급을 위해 약 22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1년 동안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을 30% 줄이고, 대통령과 부통령, 각 주의 주지사는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
- 델리NCT¹⁾의 79개 지역과 델리수도권²⁾ 중 노이다 지역의 12곳을 핫스팟으로 지정해 완전 봉쇄 조치 시행
 - 핫스팟으로 지정된 곳은 집 밖 출입 전면 통제, 모든 상점 폐쇄, 언론인도 출입 금지
 - 긴급상황 시 구급차 운행 가능. 보건인력 및 정부 지정 생필품 배달인력 등도 허용
 - 생필품, 의약품은 정부 지정 배달 업체에서 집 앞에 배달

1) 델리NCT는 올드델리와 뉴델리를 합친 특별자치시로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델리시

2) 델리NCT에 인접한 3개 주의 주요 도시를 합친 지역(구루그람, 노이다, 파리다바드, 가지아바드 지역)

- 보건인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감염자 발생 여부 등 체크
- 봉쇄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 완화를 허용하지만,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통제 조치
- 봉쇄 완화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봉쇄조치 중 일부 부문에 한해 4월 20일부터 州별로 조건부 완화
 - 운영이 허용된 분야 및 시설
 - 의료, 농어업, 금융, 물류, 유통업, 제조 및 산업시설, 건설업,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시설은 허용
 - 일부 상업 및 민간시설: 방송, 케이블서비스 등 인쇄 및 미디어, IT 관련 기업 (50% 이하 인력으로 운영), 전자상거래 기업(관련 차량은 별도 허가), 택배·특송 서비스, 냉장유통시설 및 물류창고 등
 - 봉쇄 연장 분야
 -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및 철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 운행 금지와 개개인의 이동 제한
 - 교육기관, 종교시설, 오락시설, 상업 및 민간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 제외)
 - 식당 등 접객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경우 제외), 택시(삼륜차 택시 포함)
 - 핫스팟 등 통제지역은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각 지역(District) 최고책임자는 필요시 이동을 위한 허가증 발급
- 산업·민간시설은 지침 위반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부과
- 담배 및 주류 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벌금형에 처함
- 물품 사재기와 유언비어 및 허위정보 유포로 사회적 위기감을 조성할 경우 형사 처벌

<https://www.covid19india.org/>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lockdown-set-to-be-extended-with-some-measures-to-restart-economy/articleshow/75102562.cms?utm_source=Native_Share_Tray&utm_medium=social&utm_campaign=TOIMobile

<https://www.mygov.in/covid-19>

https://static.mygov.in/rest/s3fs-public/mygov_158694130451307401.pdf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m-reviews-impact-of-covid-19-on-economy-2nd-stimulus-in-consideration/articleshow/75181012.cms?from=mdr>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의료·사회보장·경기회복 프로그램 시행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국가 GDP의 2.5% 수준인 405.1조 루피아(약 31.8조 원)를 긴급 책정하고 의료, 사회보장,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투입. 자카르타 州정부도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진의 심리상담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2만 3천여 명, 사망자는 1,400여 명
 - 자카르타州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곳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
- 의료진과 의료시설, 진단키트 등의 부족으로 확진 검사가 지연
 - 5월 말~6월 초에 누적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7월 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전망

-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불가피
 - 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21년 전 수준인 2.3%, 최악의 경우에는 0.4%로 전망
 - 2분기 0.3%로 바닥을 찍은 다음 3분기에 1.5~2.8%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5%대에서 각각 2.1%, 2.5%로 하향조정하고, 2021년에 다시 5%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빈곤층과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극심한 영향
 - 110만 명의 빈곤층과 290만 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378만 명의 빈곤층과 520만 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규모 규제 조치로 인해 소득을 잃을 위기에 처함
- 국가 주요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은 회복까지 1년 이상 소요
 - 코로나 확산 전인 1월과 2월에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각각 11.8%, 28.85% 감소

하였는데, 이후에는 이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여행업계의 3월 매출 취소율은 90%로, 손실액은 4조 루피아(약 3,153억 원) 수준

대응 방안

- 중앙정부는 ‘국민보건 비상사태’(3월 31일)와 ‘국가재난’(4월 13일)을 대통령령으로 선포
 - 비(非)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재난’으로 간주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을 조율하는 T/F 설치
 - ‘국가재난’ 선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따르게 하고 인력·물자 동원, 이민자 관리, 관세 및 검역, 조달 입찰, 인허가 등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회제약 방침을 지방정부가 자체 판단하여 추가적인 정책과 함께 실시
 - ‘봉쇄(lockdown)’라는 개념 대신에 ‘대규모 사회제약(large-scale social restri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건부가 허가
 - 휴교 및 휴업, 종교활동 제한, 공공장소 활동 제한, 집회 및 단체운동 금지, 20인 이상 장례식 참석 금지 등을 기본으로 함
 - 중앙정부는 라마단 종료 직후의 르바란 명절 임시공휴일(5월 26일~29일)을 연말로 옮기고, 4월 24일부터 자카르타 및 주요 지역에서 시민들의 고향방문 불허 결정
 - 자카르타 州정부는 대규모 사회제약을 실시하고, 차량 2부제를 임시 해제
 - 대중교통 운영시간 단축, 이륜차 공유택시의 승객 수송 불허, 헬스케어·식음료·에너지 등 11개 필수 산업 외 휴업
- 재정부는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국가 GDP의 2.5% 수준인 405.1조 루피아(약 31.8조 원)를 긴급 책정하고 의료, 사회보장,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투입 계획
 - 재원 조달 방식은 450조 루피아(약 27.5조 원) 상당의 ‘전염병 채권’ 발행
 - 110조 루피아(약 8.7조 원)는 사회보장 대응 예산으로, 그중 20조 루피아(약 1.6조 원)는 실업급여 지원
 - 자카르타 광역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410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차원에서 3개월간 매월 60만 루피아(약 47,000원)를 지급
 - 75조 루피아(약 5.9조 원)는 헬스케어 대응 예산으로, 그중 3.1~6.1조 루피아(약 2,500억~4,800억 원)는 의료진에게 보험금, 수당, 사망보상금으로 지급
 - 자카르타 州정부도 의료진에게 1일 215,000루피아(약 17,000원)의 수당을 별도

- 책정하였으며, 의료진의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학자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 70.1조 루피아(약 5.5조 원)는 기업에 세금 인센티브와 대출금으로 제공, 나머지 150조 루피아(약 11.8조 원)는 37,000여 개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및 금융 지원
 - 대부분의 민간 은행들도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미납금 탕감 등 경제난에 처한 채무자의 대출 재조정을 지원
 - 재정부는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법인세 인하 및 국외 소재 테크기업 전자상거래세 징수에 관한 세법 개정도 신속하게 착수
 - 올해 10%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코로나 극복 자구책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외 소재 디지털 테크 기업(Netflix, Zoom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해 코로나 대응에 투입
 - 사회부는 자카르타 州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카르타 내 비공식 경제 종사자 370만 명에게 식료품 패키지를 제공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를 지원하고, 이들이 경제난으로 고향으로 귀성하여 지역사회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목적
 - 식료품 패키지는 쌀, 통조림, 식용유, 비스킷 외에 면 마스크와 비누를 포함
 - 에너지천연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3.5조 루피아(약 2,750억 원)를 책정하고 국영 전력공사를 통해 지원
 - 최하위계층 등에 무료 또는 50% 할인 제공
 - 교육문화부는 3월 말 및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초·중·고교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전면 취소하고, 전국의 초·중·고·대학을 온라인 교육 또는 휴교 체제로 전환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의 홈 러닝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방송사 TVRI와 함께 '집에서 공부하자' 및 '교사 공유하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3개월간 제공
 - 공공사업주택부와 보건부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를 경증 환자 치료시설로 임시 전환하여 의료시설 부족을 보완
 - 아파트 4개동 2,836호에 최대 7천여 명의 경증 환자를 수용하여 코로나 전담 병원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증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을 방지

<https://covid19.kemkes.go.id>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중소기업 등의 도산·폐업 방지대책 시행

일본 / 코로나19

일본 정부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정하고 확산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경제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만 6천여 명, 사망자는 800여 명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 지역에서 증가하자 3월 26일 정부대책본부를 설치
 - 확진자가 급증한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을 시작으로 입원 의료 제공체제에 지장이 발생
 -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숙박시설 등에서 관리

코로나19 기본 대응방침

- 기본적인 대응방향
 - 정보 제공·공유 및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 각 지역의 접촉기회를 줄여 확산속도 억제
 - 상호감시·정보수집 및 적절한 의료 제공으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최소화
 - 적절한 감염 확산 방지책 및 경제·고용 대책으로 사회·경제 기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코로나19 대책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시점에 즉각 추진
- 대책 관련 주요 사항
 - 정보 제공·공유
 - 상호감시·정보수집
 - 감염 확산 방지
 - 의료 제공체제 확보
 - 경제·고용 대책

- 인권에 대한 배려, 물자·자재 등의 공급, 관계기관의 협력, 사회기능 유지 등

구체적인 대책: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거래에 관한 배려 요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나 그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수액이나 지급기일 등 새로운 거래조건을 서면 등으로 분명히 하는 등 하청 진흥법 등의 취지를 토대로 적정하게 대응할 것
 - 개인사업자 등과의 거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이들을 우선 발주대상으로 할 것
 - 개인사업자 등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휴교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이유로 납기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응할 것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가 고용 유지를 하려는 경우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내용 및 대상을 대폭 확대

기존 조치	코로나19 관련 특례 조치
	- 긴급대응기간(2020. 4. 1 ~ 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아래의 특례 조치 시행
경제적 이유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 (모든 업종)
생산지표요건: 3개월 10% 이상 저하	생산지표요건을 완화 (1개월 5% 이상 저하)
피보험자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의 휴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율: 2/3(중소기업), 1/2(대기업)	지원율: 4/5(중소기업), 2/3(대기업)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면 9/10(중소기업), 3/4(대기업))
계획서는 사전 제출	계획서 사후 제출 인정 (1. 24 ~ 6. 30)
지급한도 일수: 1년 100일, 3년 150일	좌동(左同) + 위의 긴급대응기간
단시간 일시 휴업만	단시간 휴업 요건을 완화
휴업 규모 요건: 1/20(중소기업), 1/15(대기업)	휴업 규모 요건 완화: 1/40(중소기업), 1/30(대기업)

- 중소기업 경영력 강화 지원펀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핵심 사업자가 도산·폐업하지 않도록 민관 연계의 새로운 전국 펀드를 만들어 재생과 제3자 승계 양면을 지원
 - 사업인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경영력 강화와 이후 성장을 전면 지원
- 재택근무에 관한 정보 제공
 - 재택근무에 관한 자료 제공이나 무료 상담, 재택근무 도입 및 효과 향상 사례 소개, 이용할 수 있는 위성 사무실(satellite office) 소개 등
 - 전문가를 파견해 재택근무 도입 효과, 시스템 도입 방법, 지원책 등에 관해 조언
-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강화 대책 사업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속력강화계획’ 책정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나 콘텐츠를 작성·공표
 - 코로나19 대책 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계속력강화계획’ 등의 책정을 지원
 -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세제 우대나 금융 지원

<https://corona.go.jp/>

https://www.news24.jp/archives/corona_map/index2.html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22473.pdf>

<https://www.meti.go.jp/covid-19/pdf/pamphlet.pdf>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aisaku_honbu.html

<https://www.city.osaka.lg.jp/contents/wdu010/covid19/>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개인휴대폰의 QR코드 활용해 생활 방역활동 진행

중국 베이징시 / 코로나19

중국 베이징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었다고 보고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시는 생활방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젠강바오(建康寶)의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방역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및 대책

-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8만여 명, 사망자 수는 4천여 명
- 베이징시는 그동안 외부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
 - 베이징 입국자 전원을 집중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
 -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14일간 격리조치
 - 휴대폰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이동 통제
- 베이징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었다고 보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체제로 전환하겠다고 4월 18일 발표

베이징 방역체제의 특징

- 시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 1명으로 인해 베이징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권고
 - ‘해외 유입, 국내 재확산 차단’ 정책을 견지
 - 일상생활에서는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손 씻기의 생활화 등 생활방역 실시
 - 14일간 집중격리 해제 후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
- 시는 4월 18일 생활방역 체제에 진입했으며, 생활방역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개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건강확인 QR코드인 젠강바오(建康寶)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개인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젠강바오의 QR코드를 활용하여 건강정보와 여행 이력,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

- 젠캉바오는 베이징 버전의 개인별 휴대폰 건강코드. 주민들은 개인휴대폰에 젠캉바오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젠캉바오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의 상태를 3가지 색상의 QR코드로 나누어 표시. QR코드의 빨간색은 집중관찰, 주황색은 자가격리, 녹색은 이상 없음을 뜻함
- 市가 생활방역 체제에 진입하면서 市의 각 기관은 젠캉바오를 활용해 직원, 방문객, 서비스 제공업체, 거주민 등에 대한 방역 건강정보를 확인
-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녹색 QR코드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은 다중 이용시설 출입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市의 생활방역 체제에 따라 업무 및 생산 재개를 진행하더라도 방역 관련 건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또한 市는 녹색 QR코드를 제시할 수 있고 체온이 정상인 배달원이나 가사도우미 등이 단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

정책 평가

- 중국에서는 지역별로 건강코드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강정보와 여행 이력,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데, IT산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함
- 베이징의 젠캉바오 이외에 상하이市에서는 수이션마(隨申碼), 강소성(省)에서는 수캉마(蘇康碼), 쑤저우市에서는 수청마(蘇城碼) 등 지역별로 건강코드 시스템을 운영
- 건강코드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실을 비롯해 개인의 건강 정보와 여행 이력,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http://news.sina.com.cn/c/2020-04-18/doc-iircuyvh8543118.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64478386794846819&wfr=spider&for=pc>

문 해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77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5월 2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